목 차

Ⅰ. 2017년 경제전망

Ⅱ.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전망

Ⅲ.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

Ⅳ. 은행산업 환경변화와 전망

목 차

Ⅲ.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

1. 개관

2. 보험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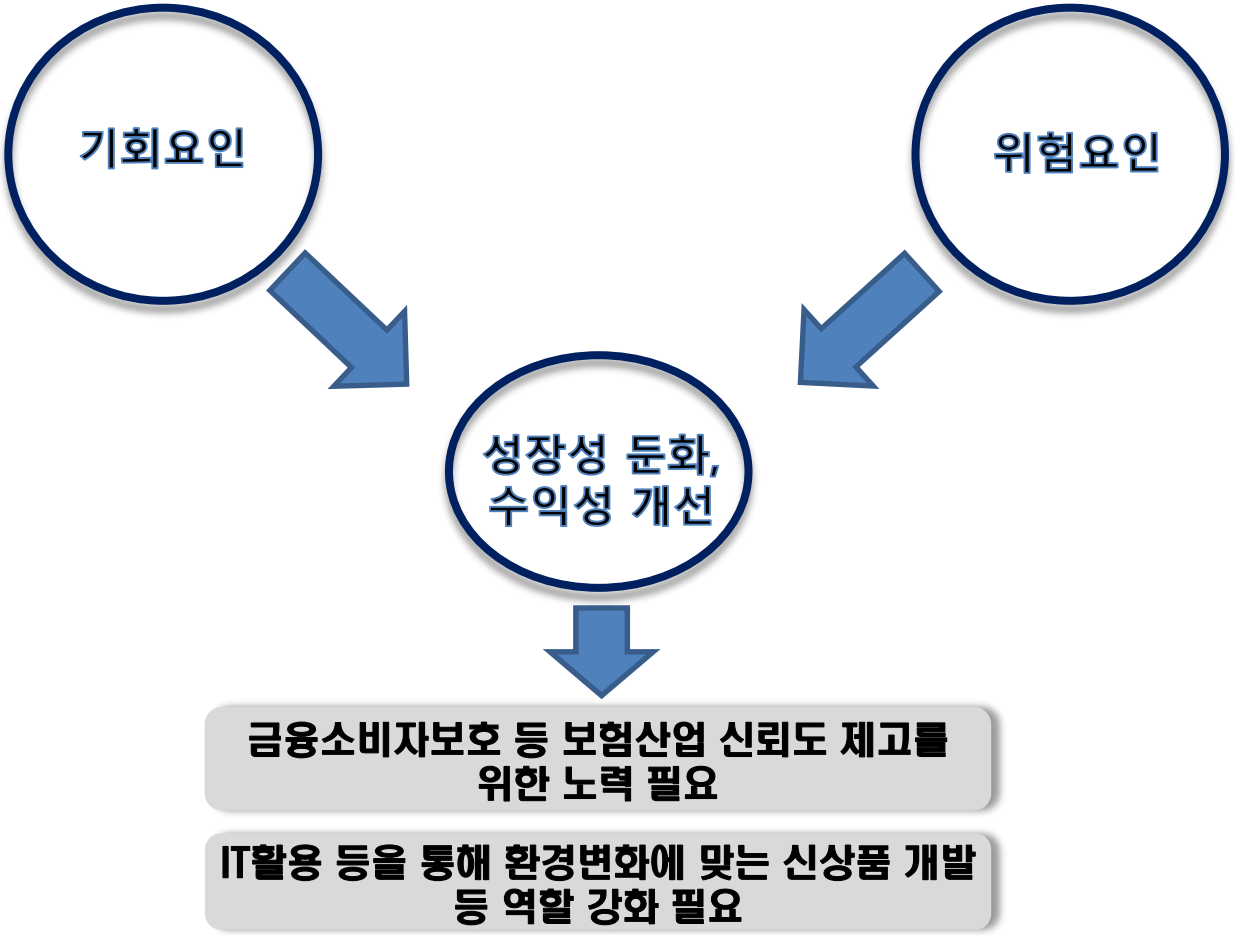
3. 여신전문금융업

4. 서민금융기관

5. 정책서민금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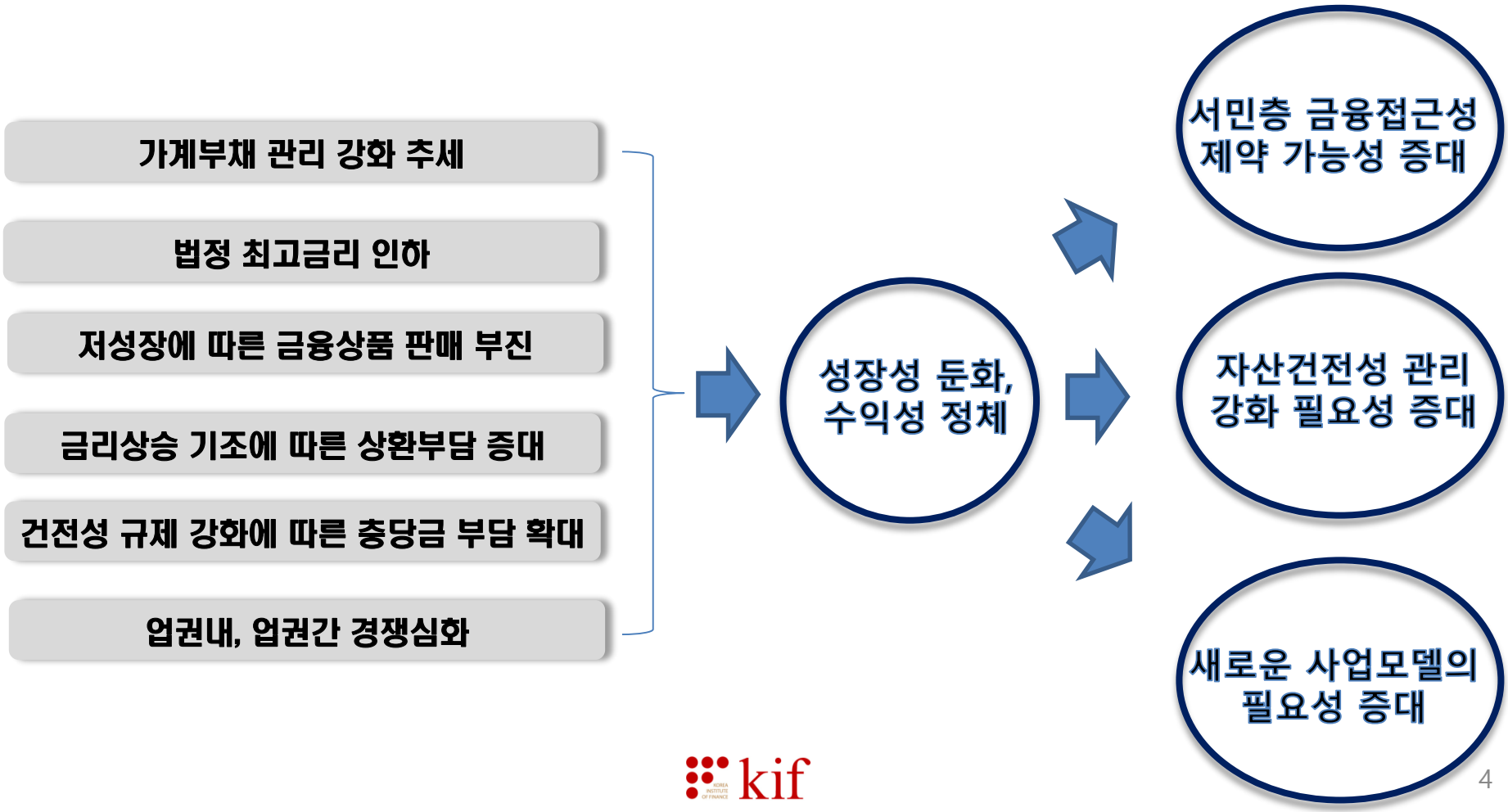
금융산업 주요이슈

◆ 보험업권: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보험산업 역할 강화 노력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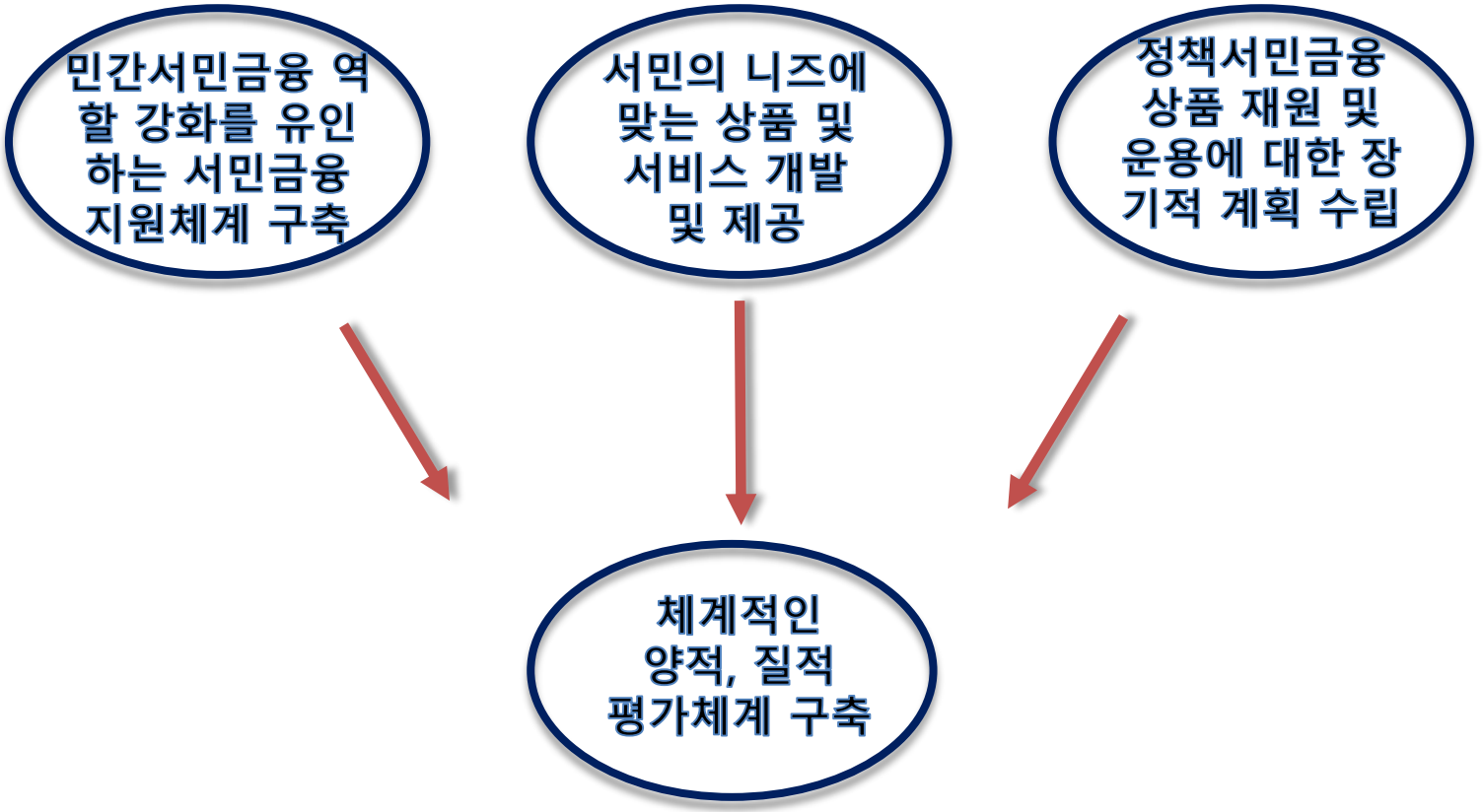
금융산업 주요이슈

◆ 중소금융업권(여전업, 저축은행, 상호금융): 경기부진, 제도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성장성 둔화, 수익성 정체 예상 → 선제적 대응 필요성 증대



금융산업 주요이슈

◆ 서민금융: 서민금융 수요증대에 따른 정책방향 설정 필요



목 차

Ⅲ.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

1. 개관

2. 보험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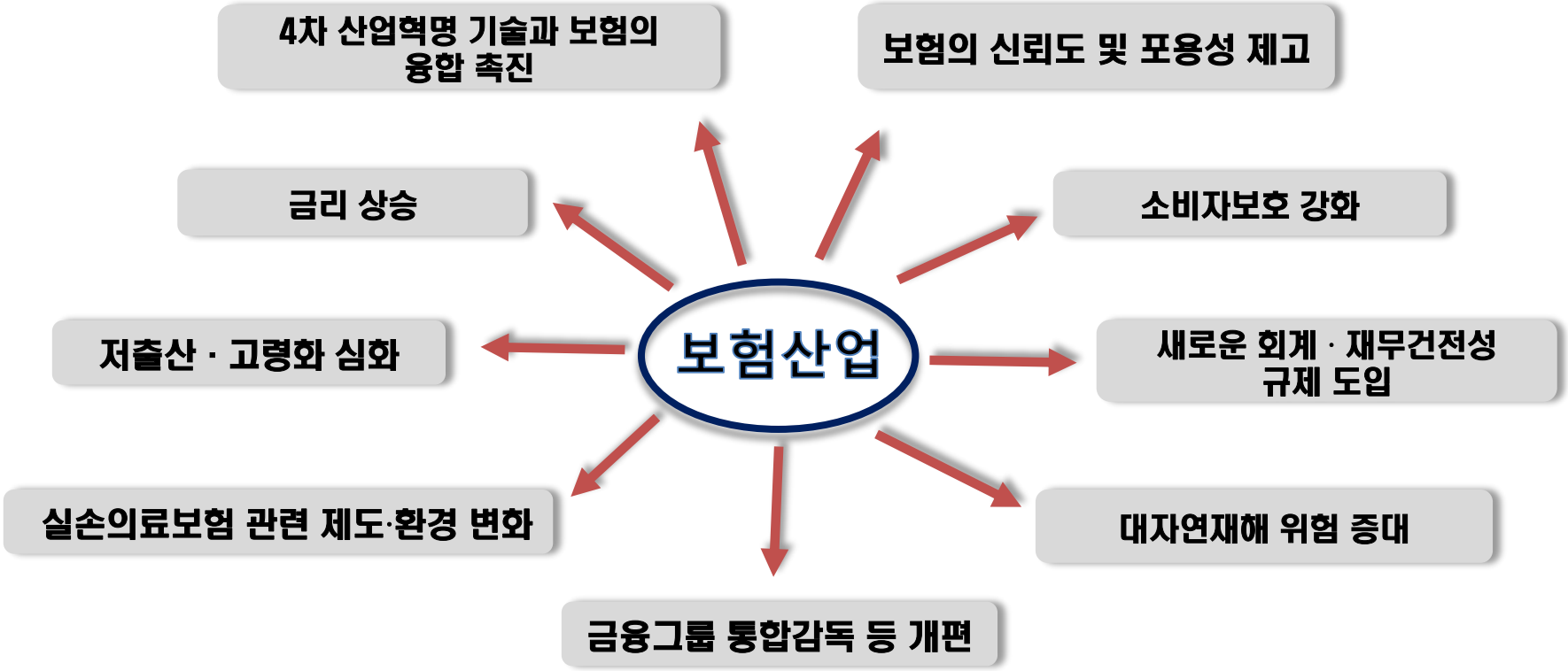
3. 여신전문금융업

4. 서민금융기관

5. 정책 서민금융

가. 2018년 보험산업 경영환경

◆ 2018년에는 금리상승·고령화심화·4차산업혁명 촉진 등의 영업환경과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부문의 신뢰도 및 포용성 제고가 요구될 전망



나. 2018년 경영성과 전망 요인(생명보험)

기회 요인

- 금리상승 기조: 이차역마진 완화 등 자산운용 수익성 개선 기대
- 건강·질병관련 상품 수요 증대 등에 힘입은 보장성 상품 위주 전략 지속·강화
- 투자형 보험상품 수요 증대, 판매전략 강화 등에 따른 변액보험 판매실적 개선
- 고령화시대 노후생활 대비 관련상품 수요 증대
- IT(웨어러블기기 등)와 보험상품 융합 촉진에 따른 신상품 개발 및 수익성 개선
- 국민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(수익성) 개선
- 보험의 신뢰도 및 포용성 제고를 통한 생보산업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
- IFRS 17 도입: 중·장기적 재무건전성 체질 개선의 기회

위험 요인

- 가계부채 증가 및 가처분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가입 여력 저하
-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확대 및 RBC비율 하락, 대출채권 건전성 저하 우려
- 과거 판매된 고금리 확정형상품 부담 및 이차역마진 현상 지속 예상
- IFRS 17 도입 준비,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 등에 따른 자본확충·책임적립금 부담 증대, 지급여력지표 저하 가능성
- 대체투자 확대 등에 따른 자산운용리스크 증대
- 보험의 신뢰도 및 포용성 제고가 단기적으로 수익성 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
-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등에 따른 규제비용 증가

나. 2018년 경영성과 전망 요인(손해보험)

기회 요인

-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등의 손해율 안정화 노력 지속(보험사기 방지 강화, 각종 제도 개선 등)
- 국민건강보험 강화 대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개선
- 100세시대 노후소득 대비 관련상품 수요 증대
- IT와 보험상품 융합 촉진에 따른 신상품 개발 및 신수요 창출, 수익성 개선
- 일반손해보험(화재보험, 해상보험, 책임보험, 보증보험 등) 수요 증대 및 활성화 추세
- 간단보험(여행자보험, 전세금보장보험 등) 활성화 정책 계획
- 신종위험 발생 증가에 따른 관련 보장상품 수요 증대 및 활성화
- 보험의 신뢰도 및 포용성 강화를 통한 손보산업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

위험 요인

- 가계부채 증가, 체감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신규 가입 위축 및 기존계약 해약 우려
- 자동차보험료율 인하 및 가격경쟁 심화
- 국민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율 인하 유도 및 성장세 위축
- 외화증권, 대출채권 운용 확대 등에 따른 투자리스크 증대
- IFRS 17 도입 준비,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 등에 따른 RBC비율 저하 가능성(특히 중소형 손보사)
- 보험의 신뢰도 및 포용성 제고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성 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
- 대자연재해 및 신종위험 발생 가능성 증대
-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에 따른 규제비용 증가

다. 2018년 경영성과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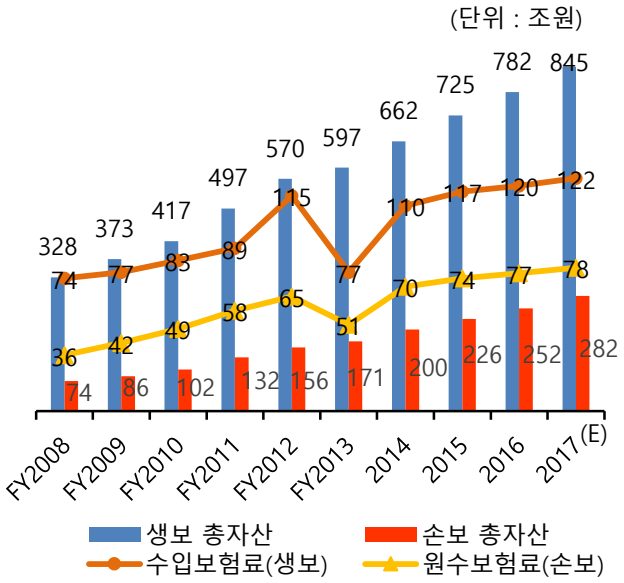
생명보험

◆ 금리상승 기조와 보장성보험 위주 판매전략에 따른 이차역마진 부담 완화 및 자산운용수익률 상승, 위험손해율 개선 등으로 소폭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한편, 경제 저성장 및 저축성보험 판매 위축 등으로 성장성은 둔화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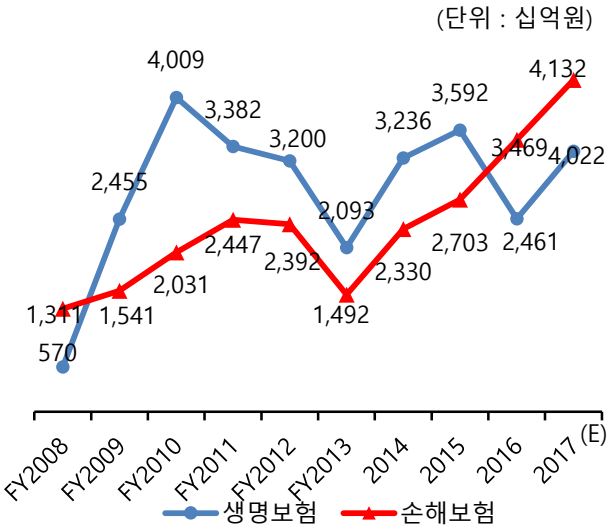
손해보험

◆ 수익성은 긍정적 요인(실손의료보험 등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개선, 다양한 제도 시행 등)과 부정적 요인(자동차보험료,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유도 등)이 혼재하는 가운데 투자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 소폭 개선이 기대되며, 저축성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매출 감소 등으로 성장성은 둔화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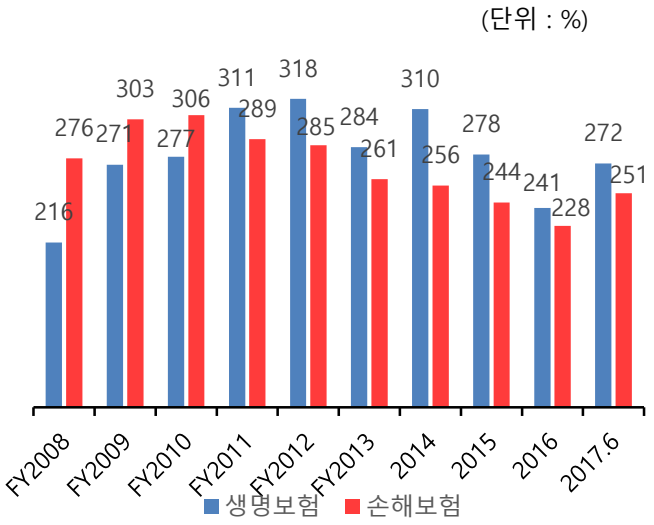
성장성(총자산, 수입보험료)



수익성(당기순이익)



지급여력(RBC)비율



자료 : 금융통계정보, 금융감독원

라. 2018년 경영·정책 과제

◆ 보험부문의 신뢰도 제고 및 포용성 강화

◆ 소비자보호 강화 및 권익 제고

◆ 4차 산업혁명 기술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한 혁신 보험 상품·서비스 개발

◆ 저출산·고령화 관련 보험산업 역할 강화

◆ 보험 본연의 기능 및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

◆ 신 회계기준 · 건전성규제 선제적 대응

◆ 수익성 제고(보험영업·투자영업) 방안 강구

◆ 보험금 누수 및 보험사기 근절 방안 모색

<참고>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

◆ **보험업은 판매에서 보험금지급에 이르는 과정의 장기성·복잡성, 보험용어 난이성 등으로 소비자와의 분쟁·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, 특히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소비자 신뢰가 낮음.**

-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·평판 하락은 장기적으로 지속성장·경쟁력을 저해하므로 적극적 대처가 절실
  - ✓ 특히 보험모집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부문이 전체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

<과제>

◆ **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한 '모집경력조회시스템'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(실효성 제고)함으로써 판매행위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**

◆ **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보험금 부지급(또는 과소지급) 및 지급 지연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 개선이 필요**

◆ **보험약관 등의 용어를 일반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적으로 개편(개선)할 필요**

◆ **소비자가 보험상품 구입시 보다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공시기능도 보다 강화될 필요**

- **소위 '보험사 신뢰도지수' 또는 '소비자 만족도(경험)지수(Customer Experience Index)'를 마련하여 비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**

<참고> IT와 보험의 융합 촉진

◆ **글로벌 보험사들은 상품 및 마케팅 혁신, 보험금지급 및 보험사기 방지, 기후·재해 관련 예측 및 관련 상품 개발 등에 IT·빅데이터를 적극 활용**

보험산업의 IT·빅데이터 활용사례

	구체적 내용
상품혁신	▪ UBI(Usage Based Insurance) 자동차보험(Progressive사, Generali사 등) 및 건강보험(Discovery사, Sumitomo Life Insurance Company, Dai-ichi Life Insurance Company) ▪ 특히 최근 일본 생보사들은 건강관리·IT업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헬스케어서비스사업을 적극 추진
마케팅 활용	▪ MetLife사의 고객정보와 관련된 one-stop platform ▪ Assurant Solutions사의 콜센터 관련 고객관계관리시스템 ▪ Allianz사의 빅데이터 분석 기반 CRM 시스템 등
보험사기 방지	▪ 남아프리카의 Santam사 등은 데이터마이닝(data mining) 기반의 보험사기 분석솔루션을 개발·활용
기후·재해 관련 예측 및 관련 상품개발	▪ 날씨·기후 빅데이터에 기반한 농작물 보험상품 개발(미국 MetroMile사 등), 거대위험 발생에 대한 예측분석(Datum사 등)
기타	▪ 데이터 분석 및 IT를 보험사의 전사적리스크관리(ERM)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도 활용

◆ **국내 보험산업도 상품개발에서 보험금지급 단계에 이르는 다양한 부문에 IT·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접목·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**

- 우리나라 보험업권의 IT·빅데이터 활용은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제약요건(개인정보보호 규제, 인프라·인력 투자 미흡 등)으로 주요국에 비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초보적인 수준
- 보험업권의 IT·빅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등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고려(예를 들어 웨어러블기기, 텔레매틱스 등의 보험상품 접목·활용 관련)
- 보험과 IT 융합 촉진에 의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규제관련 이슈·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(예로, 자율주행차 사고에 따른 책임 소재 등)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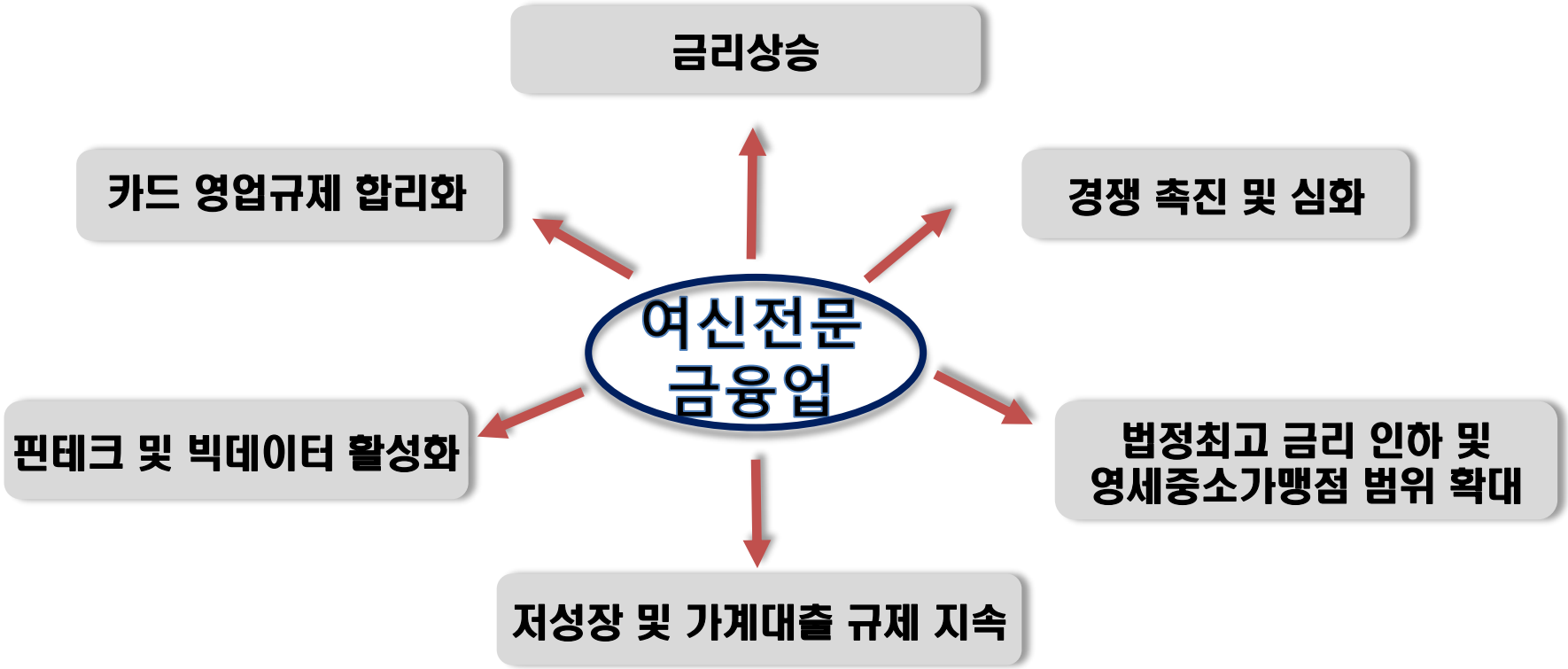
Ⅲ.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

1. 개관
2. 보험산업
3. **여신전문금융업**
4. 서민금융기관
5. 정책 서민금융

가. 2018년 여신전문금융업 경영환경

◆ 2018년 경영환경은 기회·우려 요인이 병존하는 가운데 업황이 위축될 전망

- 빅데이터 활성화와 신용카드 운영체계효율화는 여신전문업 수익성 개선에 기여
- 가계대출 규제 지속 및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는 수익성 악화에 기여



나. 2018년 경영성과 전망 요인(신용카드업)

기회요인	위험요인
▪ 빅데이터 활용 : 고객 타겟 마케팅 ▪ 인공지능활용 : 부정거래 탐지, 고객신용평가 및 심사 ▪ 신용카드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: 밴 위탁업무 축소(직라인 설치, 카드전표 직매입) ▪ 정부 정책수단으로의 이용 확대 :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▪ 신사업 허용 : 결제·송금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충전카드 출시, 해외금융기관과 연계한 해외신용카드 발급 등 ▪ 영업규제 합리화 :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, 해지 신청고객에 대한 타 상품 권유 허용	▪ 중소영세가맹점 수수료 추가인하 ▪ 중소영세가맹점 범위 확대 효과 본격화 ▪ 법정최고금리 인하(24%) ▪ 가계대출 규제 강화 지속 ▪ IT 와 금융의 융복합에 따른 업권 간 경쟁 심화 ▪ 카드사용 증가율 둔화에 따른 업권 내 경쟁 심화 ▪ 금리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및 부실율 증가

다. 2018년 경영성과 전망요인(기타 여신전문금융업)

기회요인	위험요인
▪ 빅데이터 활성화 : 고객별 소비성향 유형분석에 따른 타겟 마케팅 ▪ 인공지능 활용 : 신용평가모델, 부정거래방지, 소비컨설팅과 자산관리 상담서비스 개선 ▪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▪ 신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 기조 : 기업투자촉진법(가칭)* 제정 추진 등 *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관련 법안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원화하는 법	▪ 법정최고금리 인하(24%) ▪ 가계대출 관련 규제 지속 ▪ 자동차 금융 등 주요 시장에서의 업권 간, 업권 내 경쟁 심화 ▪ 포털업체의 플랫폼 비즈니스 강화 ▪ 성장세 둔화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▪ 저성장에 따른 소비자 구매여력 개선 제한(자산성장성 둔화) ▪ 금리상승 시 조달부담 확대, 차주 채무상환가능 여력 축소 ▪ 취약업종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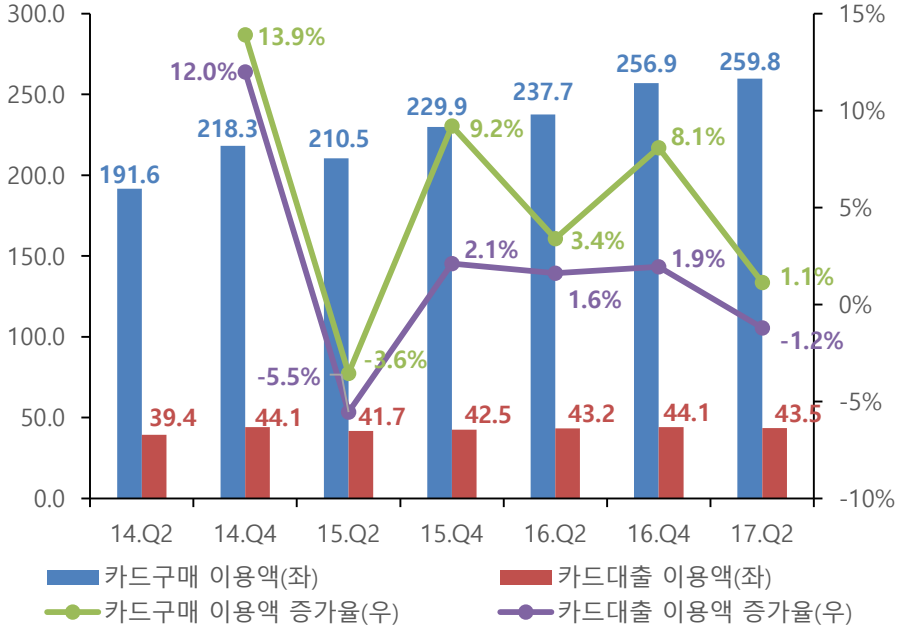
라. 2018년 경영성과 방향(전업신용카드사)

◆ 신용카드 사용 증가율 둔화 및 저성장 기조로 성장성이 정체되는 가운데 핀테크 발달로 인한 업권 간 및 업권 내 경쟁 심화로 성장률 둔화

◆ 조달금리 상승, 중소영세가맹점 범위 확대 및 수수료 인하 효과 본격화, 법정최고금리 인하,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 정체

성장성 (개인+법인의 카드 구매 및 대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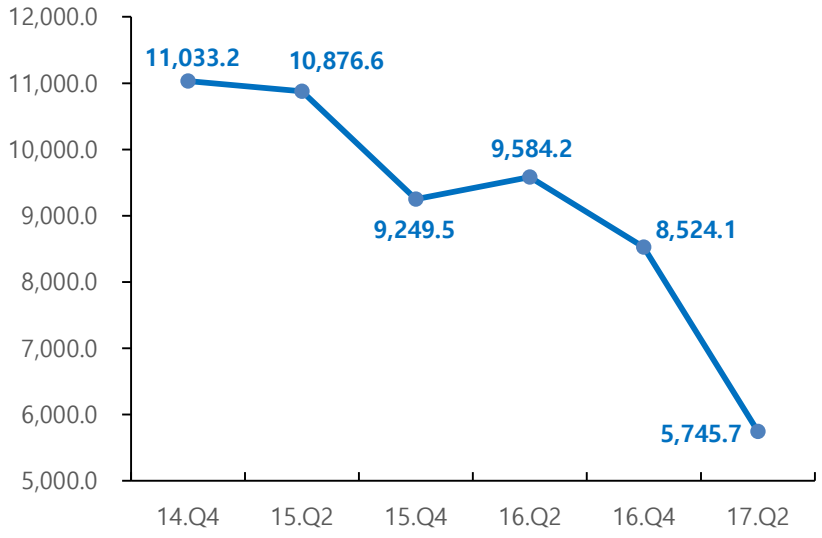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조원)



자료 : 금융통계정보, 금융감독원

수익성 (당기순이익)

(단위 : 억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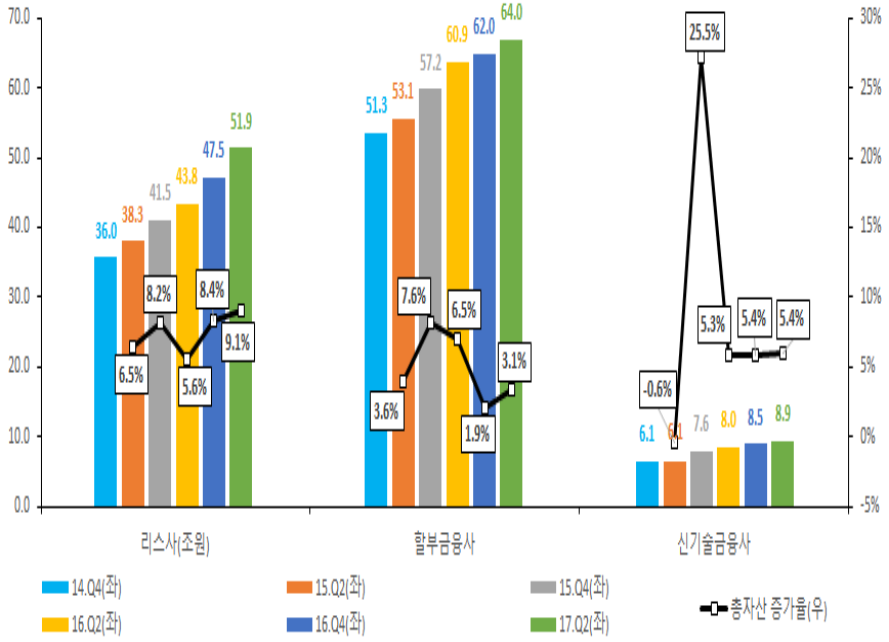
주: 대손준비금 포함
자료 : 금융통계정보, 금융감독원

마. 2018년 경영성과 방향(기타 여전업)

- ◆ 업권 간 경쟁 심화로 성장성 정체 또는 저하
- ◆ 법정최고금리 인하, 자동차 금융에서의 업권 내 및 업권간 경쟁 심화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로 수익성 정체

성장성 (총자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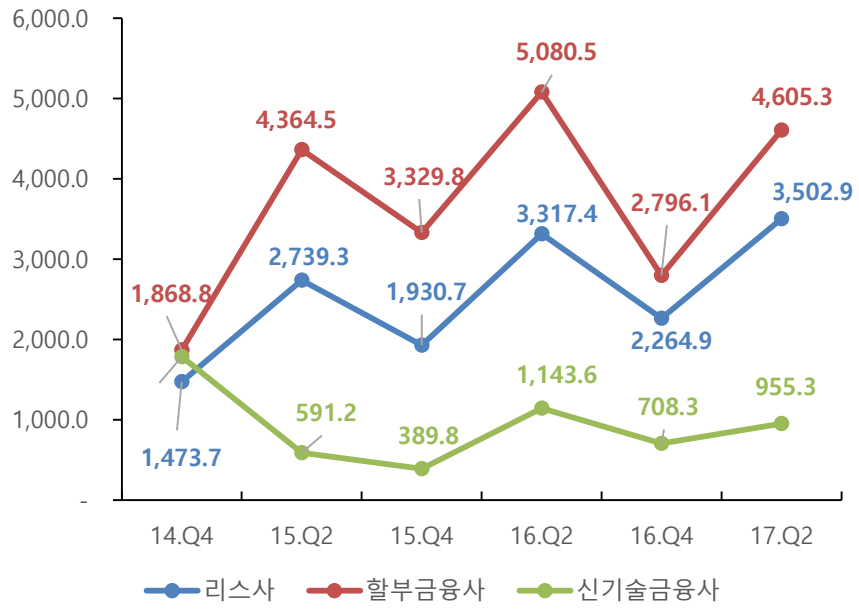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조원)



자료 : 금융통계정보, 금융감독원

수익성 (당기순이익)

(단위 : 억원)



주 : 대손준비금 포함
자료 : 금융통계정보, 금융감독원

바. 2018년 경영·정책 과제

◆ 빅데이터,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사업 발굴

◆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

◆ 기타 여신전문금융사의 수익원 다각화

◆ 대손 관리 강화

<참고>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적정 정부개입

- ◆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정부의 활성화정책에 힘입어 급속하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협상력이 저하된 가맹점이 과중한 비용을 부담
- ◆ 이의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이 당연 시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는 시장질서 훼손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
- ◆ 향후 정부는 시장실패 해소 등 개입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

	호주, EU 등 여타 국가	우리나라
정부개입근거	▪ 시장실패* 해소 * 가맹점수수료(정산수수료)가 경쟁적으로 결정되지 못함. ▪ 카드회원에 대한 많은 혜택은 지급수단별 거래비용(price signal)을 왜곡함으로써 저비용 지급수단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	▪ 시장실패 부작용* 축소 * 불합리한 가맹점수수료 체계 : 가맹점 간 협상력 차이로 대형 및 중소형가맹점 간 가맹점 수수료 격차 큼.
개입 목표	▪ 지급수단,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(정산수수료)가 경쟁적으로 결정되도록 함.	▪ 불합리한 가맹점수수료 개선 및 중소형 가맹점 보호
가맹점 수수료 정책	▪ 가맹점별 정산수수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카드사의 가중평균 정산수수료를 일정수준으로 제한 ▪ 개별가맹점 수수료는 정산수수료에 근거하여 시장에서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협약에 의해 결정	▪ 영세중소가맹점 : 금융위에서 적격비용을 고려한 고정 수수료율 제시 ▪ 일반가맹점 : 적격비용에 근거한 개별 가맹점 수수료 책정
가격차별	▪ 허용	▪ 금지

<참고> 자동차 할부금융에서의 '소유권 유보' 활용

-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근저당설정에 따른 소비자 불편 및 비용 발생
- 근저당 미설정 시 할부금융회사의 신용위험 증가

- '할부거래에 관한 법률(제6조1항8)'의 '재화의 소유권 유보 '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

<일본> '할부판매법'의 '소유권유보' 조항 활용

- 장점 : 저당권 설정방식에 비해 등기비용 저렴, 제3자로의 전매 방지, 경매절차 거치지 않는 처분 가능
- 단점 : 구매자의 자동차관련 세금 연체 시 납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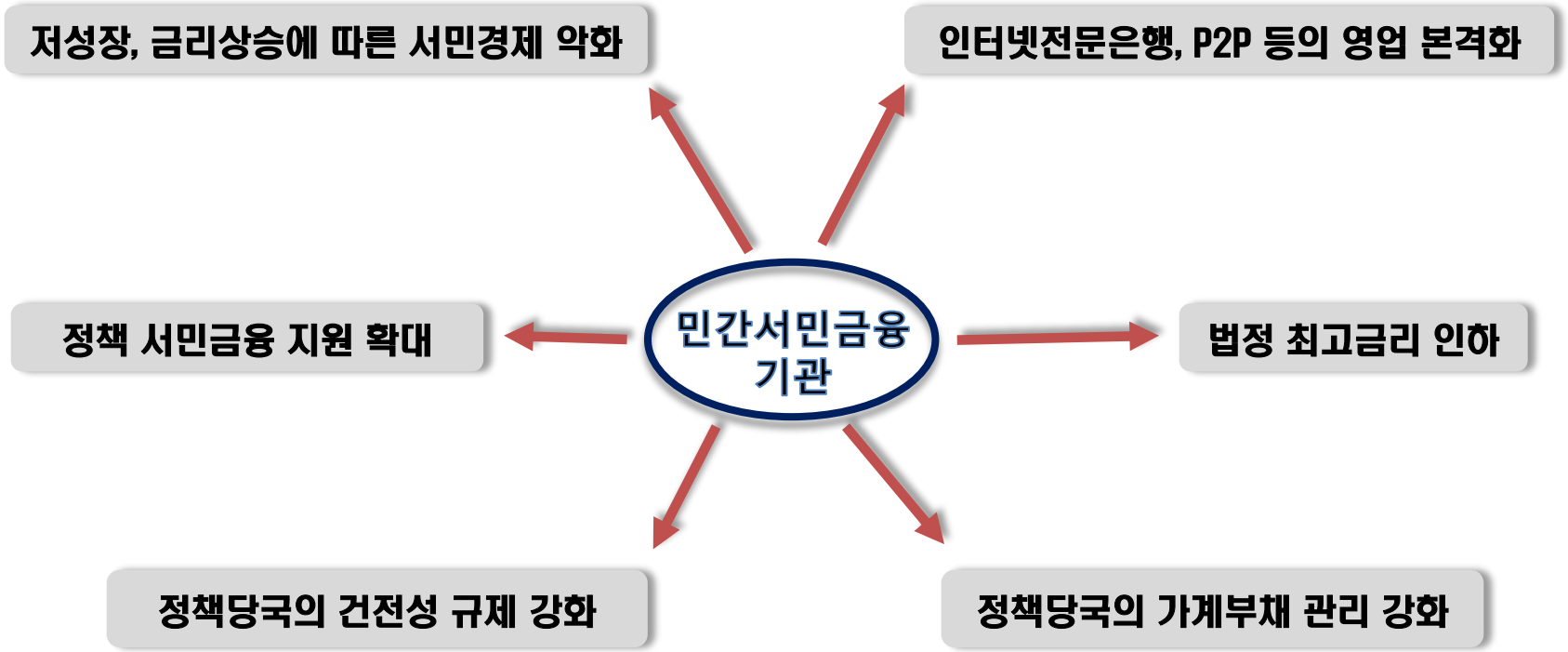
목 차

Ⅲ.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

1. 개관
2. 보험산업
3. 여신전문금융업
4. **서민금융기관**
5. 정책 서민금융

가. 2018년 서민금융기관 경영환경

◆ 2018년 서민금융기관 경영환경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업권내 및 업권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



나. 2018년 경영성과 전망 요인

기회 요인

- ◆ 저성장 기조에 따른 서민들의 높은 자금수요 지속
- ◆ 고령화 등에 의한 자영업 진입 확대 등이 지속되며 자영업자의 자금수요 증가 지속
- ◆ 햇살론, 사잇돌 대출 등 정책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신규 수요 확보
- ◆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축은행의 대부업 자금 수요 일부 흡수
- ◆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
  - ▪ 신협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도록 신협법 개정 등을 검토

위험 요인

- ◆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국내금리 상승 가능성
- ◆ 부동산 경기 변동 등에 의한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관련 부실 확대 가능성
- ◆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따른 대출 위축 가능성
- ◆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정책
  - ▪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단계적 강화
  - ▪ 금리 20% 이상 기업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시행
- ◆ 인터넷전문은행, P2P 영업 본격화에 따른 경쟁 심화
- ◆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개인신용대출 수익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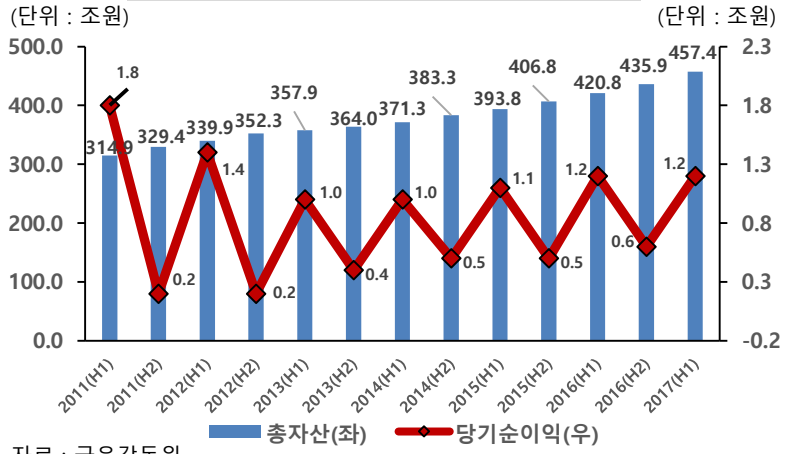
다. 2018년 경영성과 방향 (1/2)

◆ 정책당국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성장세는 2017년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연체율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

- 서민들의 높은 대출수요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, 가계부채 관리 등의 영향으로 대출증가세는 둔화될 전망
  - ✓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은행권 수준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, 금리 20% 이상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이 기업대출로 확대될 예정
  - ✓ 단,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사잇돌 대출 및 햇살론 등 서민정책금융 공급이 확대될 전망
- 건전성의 경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전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  - ✓ 단, 상호금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금리변화, 부동산 경기 변동 등이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존재
  - ✓ 저축은행 또한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고금리 신용대출, 부동산 관련 대출 등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
- 수익성의 경우 대출증가세 둔화, 충당금 확대, 업권내 및 업권간 경쟁심화,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2017년보다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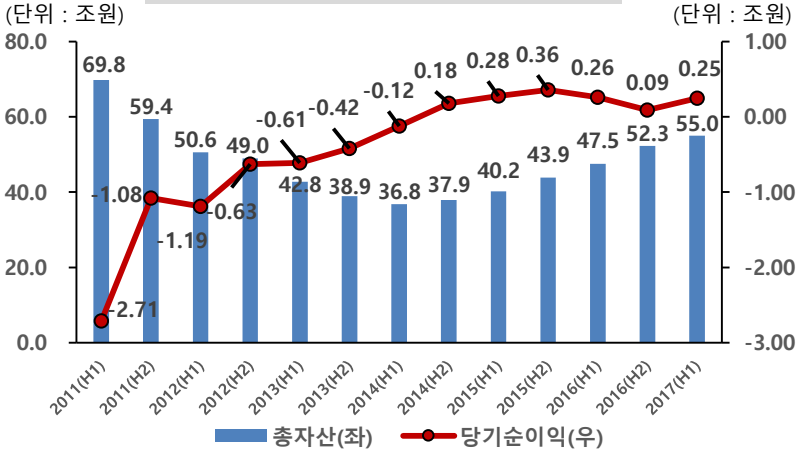
다. 2018년 경영성과 방향 (2/2)

상호금융 성장성 및 수익성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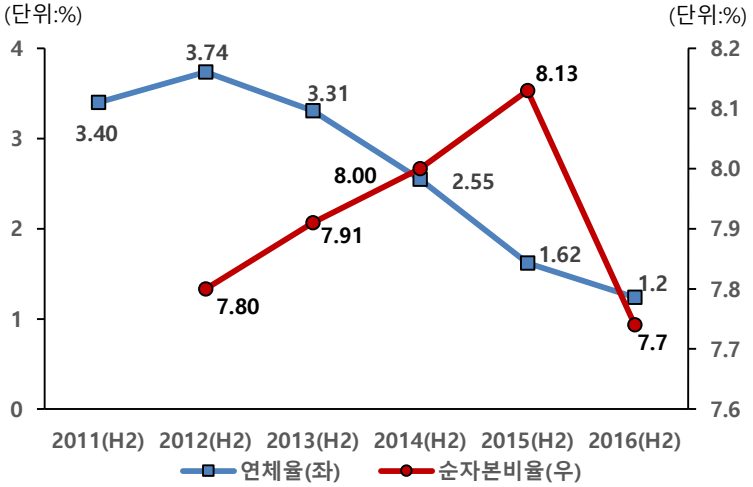
자료 : 금융감독원

저축은행 성장성 및 수익성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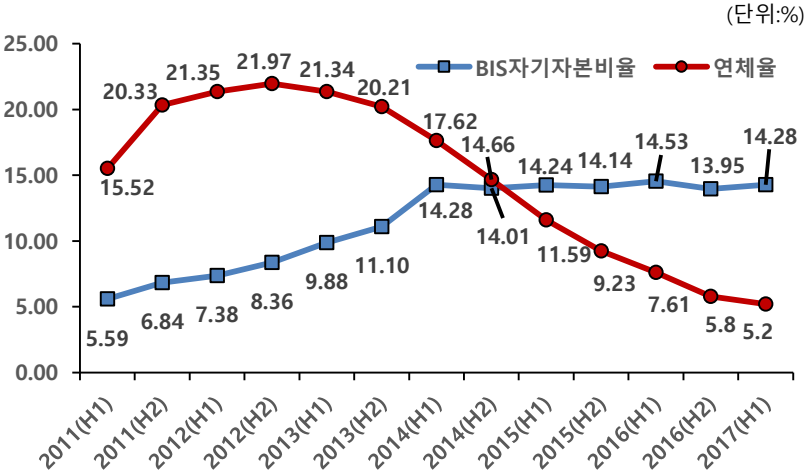
주 : 저축은행 회계연도 결산기가 12월로 변경됨.
자료 : 금융감독원

상호금융 연체율 및 순자본비율



자료 : 금융감독원

저축은행 건전성 지표



주 : 저축은행 회계연도 결산기가 12월로 변경됨.
자료 : 금융감독원

라. 2018년 경영·정책 과제

◆ 부동산 담보 대출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탈피하여 관계형 금융 지향

◆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 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고객군 확보

◆ 합리적인 신용평가에 따른 대출금리 및 서비스 차별화

◆ 책임 있는 대출을 위한 소비자보호 강화

◆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

<참고>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 및 대응방향

◆ 2018년 1월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24%로 인하될 예정

- (대부업법) 대부업자,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7.9%에서 24%로 인하될 예정
- (이자제한법)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5%에서 24%로 인하될 예정

◆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, 캐피탈 등 타 금융업권과의 금리격차가 축소되고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

- 2017년 3월말 기준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3.7%로 법정 최고금리 수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으나 금리가 24% 이상인 대출잔액이 전체 개인신용대출의 63%를 차지하고 있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
-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의 대출금리산정 방법(대출원가=조달원가+업무원가+신용원가+자본원가)을 참고하여 추정한 2016년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원가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주로 취급하는 신용 6등급 이하 고객에서 대출원가가 24%를 초과
- 특히,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높고 자본적정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

◆ 이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분석 하에 신용에 맞는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등 대출시스템을 고도화하고,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필요

<참고> 상호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 필요성 및 방향

◆ 최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 필요성이 제기

- 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복지체계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
- 하지만 현재 기업 생애 주기 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담보부족 및 매출실적 미비 등으로 인해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(기재부, 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(2015))
- 이는 은행 등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이윤 극대화의 목적 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금융규제 등에 의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출 심사 수행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

◆ 소유구조 및 경영목적이 은행 등 일반 금융회사와 달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자금조달수단 제공에 이점이 있는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

- 상호금융기관은 상호소유, 공동체 소유 등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어 소유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, 직원, 지역사회 거주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다소 낮지만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에 대한 금융수단 제공이 은행보다 용이
-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에 특화한 여신심사 Best Practice의 마련 등을 통해 제도적 인프라를 만들어나갈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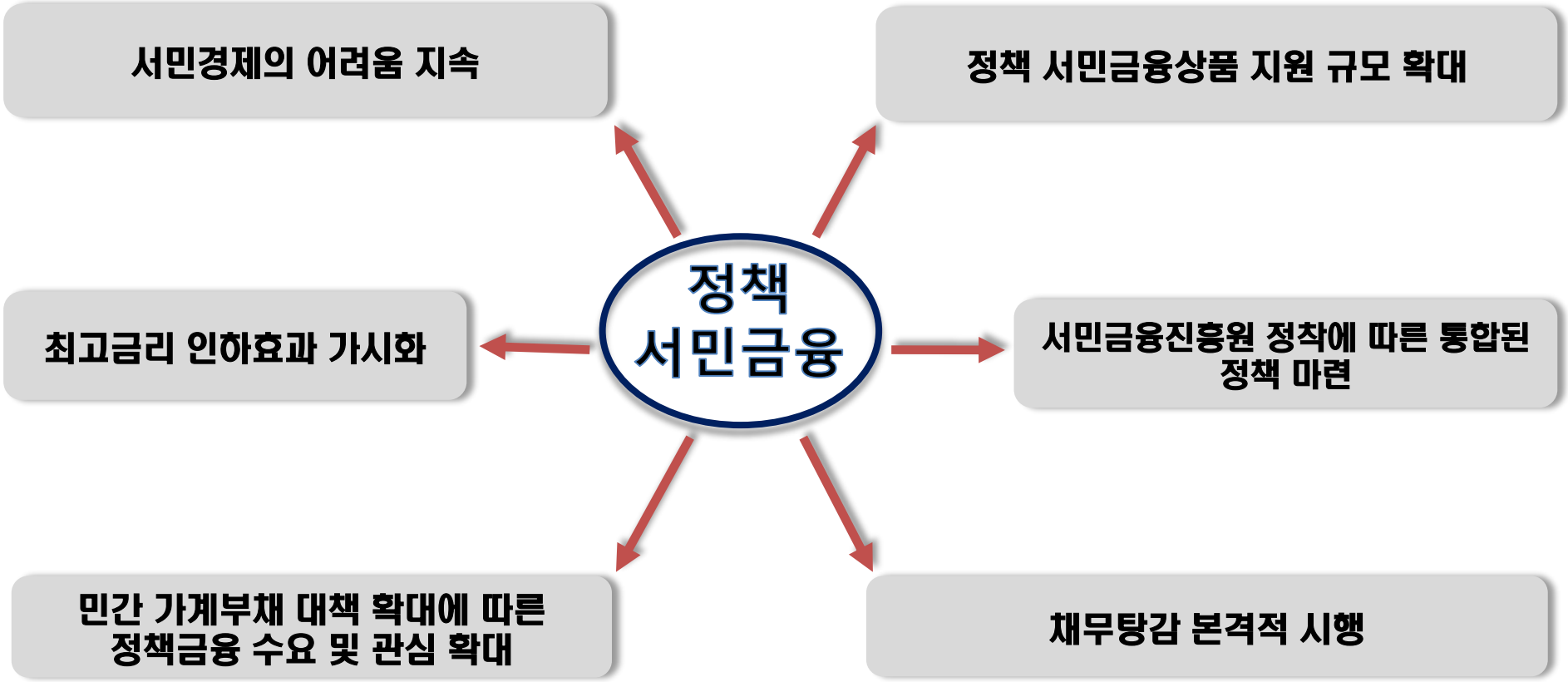
목 차

Ⅲ.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

1. 개관
2. 보험산업
3. 여신전문금융업
4. 서민금융기관
5. **정책 서민금융**

가. 2018년 정책 서민금융 환경

◆ 2018년 정책 서민금융은 양적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질적 개선 노력이 진행될 전망



나. 2018년 전망 요인

◆ 서민경제의 어려움 지속, 가계부채 대책 확대,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확대된 정책서민금융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및 시행

지원 확대요인	위험요인
▪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받지 못하는 서민층 발생 가능성 ▪ 가계부채 대책 확대가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▪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 확대 노력과 함께 지원규모의 확대 가능성	▪ 지원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연체 및 대위변제 규모 확대 가능성 ▪ 정책 서민금융의 양적 확대가 민간 서민금융회사들의 자체적인 서민금융 역할을 구축할 가능성

다. 2018년 성과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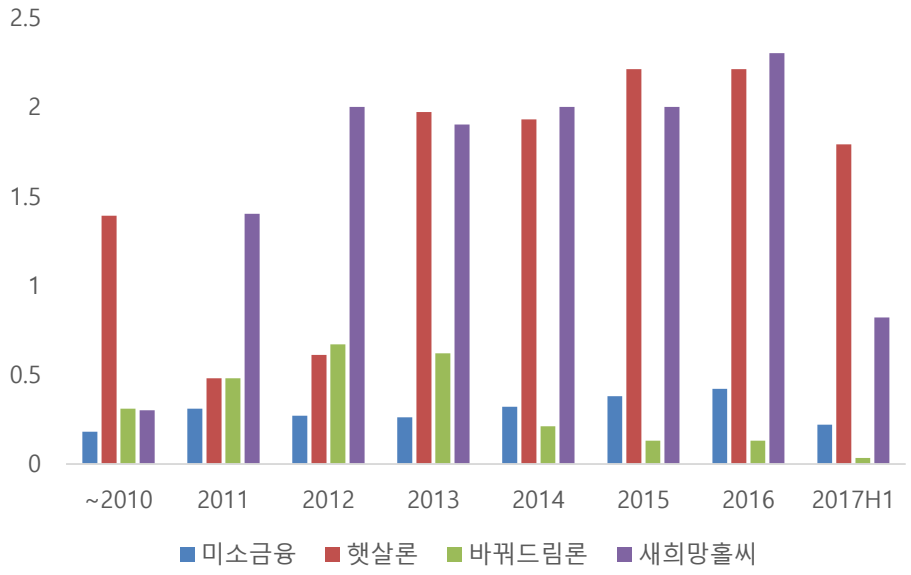
◆ **단기적으로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**

- 지원 규모의 확대로 인해 부실률이 확대되진 않더라도 부실규모가 확대될 가능성

◆ **정책서민금융의 성과는 지원실적, 부실규모 등 양적인 측면보다는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되었는지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평가 체계 구축 필요**

대출실적 추이

(단위 : 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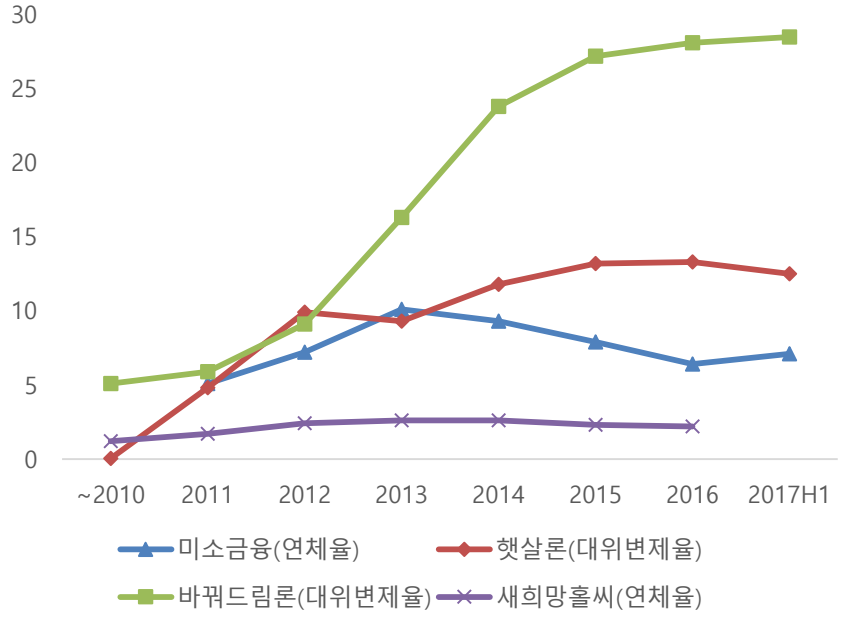


주 : 새희망홀씨의 경우 2017년 예정 지원 규모는 3조원 수준임

자료 : 서민금융진흥원

연체율 및 대위변제율 추이

(단위 : %)



라. 2018년 정책과제

◆ 정책적 자금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서민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체계 구축

◆ 장기채무불이행자 등에 대하여 채무탕감뿐만 아니라 필요시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

◆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역할 강화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

◆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및 재원·운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

◆ 서민금융진흥원의 중장기적인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, 서민금융진흥원과 여타 다양한 서민금융관련 기관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

<참고>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전후 차입자 이용 금융기관 변화

◆ **정책서민금융 상품 지원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전후 차입자들이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업권이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음.**

-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의 목적은 서민들에게 금융이용기회 확대, 금융비용부담 경감을 통해 이들의 신용환경이 개선되도록 유인하는 것임.
- 우리나라와 같이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하는 금융업권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는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후 대출을 이용하는 업권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통해 지원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.

◆ **정책서민금융상품 차입 후 차입자가 이용하는 업권이 개선된 경우보다는 악화된 사례가 보다 다수인 것으로 평가**

- 이용직전 대출을 미보유하던 차입자의 과반이상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2년이 지나도 대출을 보유
- 은행만 이용하던 차입자의 과반수 이상이 이용 2년후 비은행 대출을 보유
- 반면 비은행(은행+비은행 또는 비은행only) 대출을 보유하던 차입자의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후 은행만 이용하게 된 비중은 높지 않음.

◆ **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후에도 상담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하여 이들의 신용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확인할 필요**

<표> 정책서민금융상품 차입전후 이용 금융기관의 변화(%)

-1Q	8Q	햇살론	새희망홀씨	바꿔드림론
대출미보유	대출미보유	40.7	41.7	41.8
	은행ONLY	6.3	19.7	7.3
	은행+비은행	9.4	13.4	10.0
	비은행ONLY	43.6	25.1	40.8
은행ONLY	대출미보유	17.7	21.3	19.9
	은행ONLY	26.6	39.6	28.7
	은행+비은행	38.2	26.6	36.6
	비은행ONLY	17.5	12.5	14.8
은행+비은행	대출미보유	9.4	10.8	12.0
	은행ONLY	10.0	16.5	12.5
	은행+비은행	55.2	44.2	53.0
	비은행ONLY	25.5	28.5	22.5
비은행 ONLY	대출미보유	16.7	19.2	22.0
	은행ONLY	3.1	11.7	4.5
	은행+비은행	13.3	21.3	14.2
	비은행ONLY	66.9	47.8	59.3

* 2011.1월~2014.9월까지의 KCB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자료를 분석
* 자료: 구정한, 이규복, 이수진(2016)